

민주 '先ISD재협상' 양국 서면합의 요구

與 "강행처리" 野 "결사저지" ... 24일 본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

민주당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해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양국 간 서면 합의'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방침이나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여서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웅섭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즉각적인 ISD 재협상'이라는 서면 약속이 있으면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강행 처리 시도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6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한번 비준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성곤·강봉균 의원 등 협상과 의원들은 물리적 저지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절충점 모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분위기가 알려지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재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준안은

강행처리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단독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민주당 의총이 끝난 뒤에 열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1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관한 당의 최종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정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arack Obama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FTA 발효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헌·당규 무시 통합은 쿠데타... 절대 용납안돼"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나서려는 것은 '정당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 내일 정치를 그만 두더라도 이 같은 통합은 용납할 수 없다."

야권 통합 방법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혁신과 통합 등 시민사회세력과의 통합은 합당이나 창당 형식이 아닌 민주당 복당과 영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권 통합 방법론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통합 추진이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 문제는 수임기

구 구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당헌 1조에 '민주당의 당원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 나온다'고 적시돼 있다.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도부 몇몇이 통합 논의를 독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일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이 같은 방식의 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지 않은 채 연석회의를 여는 것은 '정당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석회의의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민노당 등 진보정당을 제외한 혁신과 통합 등 시민사회세력과의 중통합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혁신과 통합

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40~50% 정도가 민주당원이다. 또한, 과거 민주당이었던 민중당 성향을 포함하면 최소 80%를 넘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근간을 흔들면서 통합하자는 것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제3지대 신당 창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유지돼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당명·당론

을 흔들면서 통합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최면을 거는 것이며 정당 정치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통합이 국민적 감동을 견인하기 보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공감한다. 안풍(안철수 바람)의 메시지는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의 본질이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콘텐츠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 정당의 본질인 민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통합 논의에 지역 정치권이 소외되고 있다.

▲통합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일부 세력은 지역당 탈피를 명분으로 호남 정치권의 파괴가 필요하다는 태도도 은연중에 보이고 있다. 현재의 논의대로 통합 정당대회가 개최된다면 민주당의 핵심이었던 호남 정치권이 경우에 따라 종속 변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이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시민사회세력 통합 민주당 복당·영입 형식 거쳐야

지역당 탈피 명분 호남정치권 파괴 좌시할 수 없어

-통합 추진의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신설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당대회를 통해 수임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앙위원회를 통해서도 수임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후 당 밖 세력과의 합당이나 창당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공식적인 통합수임기구도 구성

재산 사회학원 안철수 '그랜드플랜' 추진하나

편지정치 등 조용한 행보 대권 향한 신비주의 전략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검토·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원 편지·보유지분 1500억원대 사회 환원 등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잇단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대선을 불과 1년 남짓 앞둔 정치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중 1~2위를 달리는 안 원장의 리더십 유희와 향후 정치 행보를 가늠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 편지정치·신비주의 전략(?) = 그는 지난 14일 1500억원 상당의 사채 출연 계획을 안철수연구소 임직원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편지정치의 배경을 놓고 기존 정치권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기획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주변 인사들은 그가 아직 안철수연구소 이사회의 의장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 소식은 직원들에게 알린 것을 정치 행보로 보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 대권 플랜 기동하나 = 그는 사채 출연 계획에 대해 "예전부터 생각해온 것을 실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천억 원대의 재산이 대권 출마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여서 그의 행보는 대권을 향한

조기 등판론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야 움직일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원장은 야권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 지원 등 한의 주된 협력 파트너는 여권보다는 야권에 가능성이 크다. 현 집권세력에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은 그의 정치적 성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은 물론 박 시장 선거 때처럼 '김 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에서 정치 행보를 멈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장병완 의원... 개정 관련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문화산업진흥기법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기술(CT) 연구원 광주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에 따르면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CT연구원 광주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하고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특히 유인촌·정

문화산업진흥기법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기술(CT) 연구원 광주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에 따르면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CT연구원 광주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하고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특히 유인촌·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파문 반대여론 주도 김영진 의원

"5·18 삭제편 장관 해임·국조 추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파문과 관련,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16일 "지난 2007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친일파 잔재 청산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9일 확정된 집필 기준에는 이것이 모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단 일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집필기준은 대강의 원칙만 정해두고 구체적 기준

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도 불과하고 입맛에 맞는 것은 넣고 싫은 것은 빼려고 하는 의도"라며 "다시 5·18 등을 기준에 놓겠다고 하는 것은 반발이 부담스러우니 한발 물러나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만약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치권과 국회에서 주무장관인 교과부장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치료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병의 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장애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 신병을 없애드립니다!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자금: 20억원 포함
한의원/치과전문병원 등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 월 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 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회부터 책임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획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신한은행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은행중개사
☎0621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 (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방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 101평
계곡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 신용정보 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항)
- ◆대출금리 | 년 6% 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출 | 연체 (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부부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항 기록

- ①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②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③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④ 기간 - 1년~10년 (복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⑤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한도: KBA세 - 80% + a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 - 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부 642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